

大學의 學問的 風土

黃 應 淵

(梨花女大 敎育心理學科)

오늘날의 한국 대학은 우리나라 近代化의 歷史와 마찬가지로 그 제도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대체로 서양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오늘날의 한국 대학은 일제 시대의 대학 제도가 구미식의 체제로 개편되면서 비로소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이후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학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量的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왔다. 즉 해방 당시의 19개 대학이 지금은 225개의 대학(13倍增)으로, 7,800여 명의 학생이 지금은 130만여 명(153倍增)으로, 1,500명 미만의 교원 수도 지금은 약 34,000여 명(23倍增)으로 놀랄 만큼 팽창하여 왔다.

한국의 대학이 이같이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하급 학교敎育의 普遍化 現象이 상향적으로 대학까지 파급되었다는 것, 정부가 대학교敎育을 대중화시키는 門戶開放의 政策을 써왔다는 것, 産業化 過程에서 고급 인력의 수요가 급증했다는 것, 그리고 학교敎育의 상승이 사회 계층 이동의 중요 요인이 되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은 역사가 긴 선진 외국의 대학과는 달리 40년이란 짧은 기간에 너무나도 급격하게 大衆化와 大型化의 물결에 휩싸였기 때문에 각 대학 나름의 獨自의인 傳統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엄청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해야 하는 벽찬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학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무엇이었는지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한국의 대학은 量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外形的 體制를 갖추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4년제 대학마저 學問共同體로서의 기본 성격을 분명하게 설정하지 못한 까닭에 敎育·研究·社會奉仕라는 대학의 3대 機能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또 고등敎育기관간의 기능과 역할도 제대로 分化시키지 못하였다. 가령, 垂直的으로는 專門大—大學—大學院間的 기능과 역할이 단계적으로 분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중복과 모방 현상이 계속되어 왔고, 水平的으로는 同一水準의 고등敎育기관이라 하더라도 각 대학마다 獨自性과 特殊性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同色의 대학으로 규격화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國·私立大學間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한국 대학의 敎育과정 편성을 보면 專攻學科間이나 學問領域間的 장벽이 너무 높

아 학문 발전과 교수 및 연구 활동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大學의 課程이 아래로는 고등학교의 과정과 위로는 대학원의 과정과 연계성을 지녀야 함에도 불구하고 敎養課程은 고등학교의 교육 내용, 專攻課程은 대학원의 과정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수준에서 반복되는 현상을 빚고 있다. 대학에서의 敎授—學習方法도 아직까지 구태의연한 교수 중심의 강의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역시 고등교육의 質 向上을 저해하는 취약점이 되고 있다. 간혹 외국에서 새로운 교육을 받고 돌아온 젊은 교수들이 새로운 敎育 風土를 조성하려 해도 안일과 타성에 젖은 大勢에 밀려 좀처럼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세째, 한국 대학의 定員 政策은 분명한 準據 없이 그때 그때의 정치적·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부로부터 배정받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 따라서 한국의 대학들은 經營을 위한 哲學은 있어도 敎育 內容 개선을 위한 철학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학마다 學科를 신설하고 學生數를 증원함으로써 생기는 경영상의 실리가 우선하고 교수나 시설의 확충, 지역 사회의 요청, 人力 需要에 대응하는 대학 기능의 조정 등과 같은 교육적 배려는 여견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 대학의 신입생 선발 방법도 과거 40여 년 동안 무려 아홉 차례나 바뀌었지만, 어느 것 하나 大學入試制度의 본래적 기능인 대학교육 適格者의 선발과 하급 학교교육의 正常化라는 기능을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였다.

네째, 한국의 대학은 대학교육의 본질인 自律性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에 대한 정부의 政策 決定 과정을 보면 거의 폐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의 政策 執行 과정을 보더라도 자율과 창의보다는 지시와 감독 위주의 관료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6·29선언 이후 새로 입각한 徐長官이 취임 제1성으로 '교육의 정치로부터의 獨立'과 '교육 행정의 학교로의 복귀'를 밝혔다라는 사실이 저간의 사정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후 문교부가 발표한 '대학 자율화 실천 계획'을 보면 國·公立大學의 총·학장 선출 방법과 대학평의회 설치, 그리고 대학 정원제와 사립대학 등록금의 자율화 등이 특히 눈길을 끌게 한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그 機能上 自由가 요청되는 곳이다. 사실 자유는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비례한다. 또 자유의 행사에는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는 것이다.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는 理性과 知性에 토대한 價値 判斷이 있어야 되고,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사고와 건전한 批判精神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제 온 국민의 民主化 열망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되고, 그에 걸맞게 대학의 自律權도 보장되려는 이 중요한 시점을 맞아 필자는 한국의 대학들도 선진 외국의 대학과 같이 각 대학 나름의 獨自的인 學問의 風土, 즉 學風을 조성해 나가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한국의 대학들이 지난 40여 년 동안 量的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거의 모두가 同色의 大學으로 규격화·평균화되어 가는 데 그치고 말았다. 대학마다 모든 學科와 系列이 고르게 발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학인으로서, 특히 대학 행정가로서 의당히 가져 볼 만한 욕망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 여건으로 보아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면 차라리 기본 방향을 바꾸어 대학내의 어느 학과, 계열, 영역만이라도 特性化시켜 타 대학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도리어 현명하다.

학문공동체인 대학에서 主體者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가 대학내에서 자유로운 학문적 풍토와 자유분방한 연구 분위기 속에서 학문과 양심의 자유를 바탕으로 외부의 견제나 위협 없이 학생들을 지도해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學風, 즉 知的 風土는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